

동아시아 근대화와 자본주의 형성 및 전개: 대안적 이론에 의한 해석

김경동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국제적 문화접변과 정치적·문화적 선택성 원리에 의한 적응적 변동 개념 등을 포함하는 선택적 근대화론을 적용하여 19세기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두 시기에 일어난 동아시아 3국의 자본주의 생성과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동질화 및 이질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1기 근대화 과정에서는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제국주의 침투에 의한 국제적 문화접변에 중국 중심의 유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쇄국'으로 대응했으나 다양한 국내 사정에 따라 즉각 각기 상이한 적응적 변동을 시도하면서 특성이 서로 다른 자본주의가 생성했다. 1945년 이후에도 각국이 상이한 근대화 과정을 거쳐 각자 특이한 자본주의를 전개하면서 국가 개입의 형식과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3국 공히 고도 경제성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경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다.

주제어 선택적 근대화론, 정치적·문화적 선택성, 국가의 역할, 민간부문의 성격, 국가와 민간부문의 관계

I. 서론

이 글의 주목적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 전개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역사적 경험에 관한 이론적 해석을 시도하는 데 있다. 그 이론은 필자가 제안한 대안적 근대화론이다. 이론이 대안적이란 말은 근대화를 촉발한 서방이 아닌, 근대화 후발사회의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현대 세계가 경험하는 근대화의 복합적인 과정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서방에서 개시한 근대화론의 초기 전개

* 이 글은 2015년 10월 22~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MK Business News가 후원하여 위 연구소에서 개최한 국제회의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의 기조강연을 우리말로 새로 쓴 것임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어 주최 측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과정에서는 근대화로 인해 세계 사회가 동질화하리라는 수렴론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근대화 역사는 이질화도 결과한다는 사실을 목격한 지금은 동질화뿐만 아니라 이질화도 일어난다는 점을 해명할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비서방세계의 관점도 유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지역은 동아시아(혹은 동북아시아, 극동아시아)에 국한한다. 이 지역의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근접함은 물론 역사적으로도 매우 미묘한 상호연관 속에서 서로 작용하면서 지내오는 동안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흥미로운 지역이다. 특히 유교를 공통 문화유산으로 지니면서 아시아의 여타 지역에 비해 특별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므로 이 글의 주제를 다루기에는 아주 적합하다 하겠다.¹ 다만 여기서는 자본주의의 개념 자체를 새삼스레 규정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적용하는 근대화론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이미 근대화에서는 불가결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작동하는 변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근대화론에서 자본주의를 제외하거나 반대로 자본주의론에서 근대화를 도외시하면 그 이론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동아시아 자본주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대안적 근대화론을 지면을 고려하여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²

II. 선택적 근대화와 대안적 근대성 이론: 개요

1. 기본 전제

여기 적용하는 근대화론은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근대화는 인류 역사의 특정 시기, 즉 ‘근대(the modern era)’라 통칭하는 기간에 한해서 일어난 거대한 사회문화적 변용에만 해당하는 변화다. 둘째, 근대화론은 이 같은 역사

¹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3국을 분석할 때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접근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근대화 역사에서 제국주의 국가와 통상조약을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² 이 근대화 이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필자의 다른 저술에서 참조할 수 있다. Kim(1977; 1981; 1985; 2005a; 2005b; 2008); 김경동(1993; 2002).

적 변화의 내용보다는 과정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결과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일컬어 ‘근대성(modernity)’이라 한다. 그리고 근대라는 시기구분은 서방의 역사학계가 자기의 역사시기를 고대(Ancient), 중세(Medieval) 그리고 근대 혹은 근세(Modern)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Kumar, 1995: 66-100).³

2. 근대화의 역사적 의의

그러한 전제 아래 근대화의 역사적 의미를 상고하면, 다음과 같은 개념 규정이 나온다. “근대화란 인류문명사의 근대라는 시기를 여는 시점에 서부 유럽에서 시발한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방이 지목한 근대는 대략 16세기 초(서기 1500년)경을 전후하여 유럽에서 일어난 각 분야의 문명론적 변화가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한 시기로서 르네상스, 콘스탄티노플 함락, 신세계 발견, 자연과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그리고 근대자본주의를 포함하는 사회 각 분야의 혁명적 성질의 변동을 포괄한다(Black, 1966: 5-6; McNeil, 1986: 372ff; Hall et al., 1996: 3-18). 한 마디로, 시로(Chiot, 1994: 5)가 지적한 것처럼 “근대의 세계란 서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발명했고, 근대성은 그로부터 전 세계로 전파해나간 것이다.”⁴

3. 변화 과정의 주요 특성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전파’다. 근대화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때 그 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전파다. 특히 근대 자본주의는 원천적으

³ 이렇게 보면, 역사적 특정 시기인 근대가 아닌 시기에 어떤 사회가 우리가 가리키는 역사적 시기의 근대성에 매우 유사한 모습을 지니는 변화를 겪었다고 해서 그것도 근대화이고 그 결과물도 근대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오류다. 또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현대화’라 한다면 이 말은 어떤 시점에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지목하여 현대화한다고 해도 무방하여 ‘근대’라는 특정 역사성을 띠지 않으므로 이 표현 또한 분별할 필요가 있다.

⁴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서, 17세기(Eisenstadt, 1966) 또는 18세기 중엽(Martinelli, 2005: 9)이라는 주장도 있다.

로 일종의 ‘팽창주의’ 성질을 띤다. 자본주의는 목표 자체가 이윤극대화이므로 시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근대화를 촉발시킨 서유럽의 나라들은 규모가 작았다. 따라서 널리 다른 세상으로 확장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들이 발명한 근대화의 또 다른 소산인 항해, 기업 활동의 제도화, 전쟁 수행 등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해외 탐험에 과감히 나선 것이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면 제국주의적 팽창주의가 맹수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근대화는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

이러한 팽창 과정은 일종의 국제적 문화접변(international acculturation)을 초래했다. 문화가 접촉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일단 이질적 문화를 접하는 사회는 부득불 어떤 식으로든 선택적 적응(selective adaptation)을 하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마다 제 나름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해 토착화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곧 각 사회의 특유한 ‘대안적 근대성(alternative modernity)’을 자아낸다. 즉, 근대화란 ① 국제적 문화접변과, ② 적응적 변동에 의한 외래문화의 선택적 채용(selective adoption)으로 이를 토착화함으로써 자체의 대안적 근대성을 창출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국제적 문화접변

원래 문화접변이란 서로 접촉하는 문화가 상호자극으로 작용하여 양방에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이다(Moore, 1965). 그러나 전 지구적 근대화의 문화접변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tilted) 변화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경제, 과학기술, 군사 등 각 부문의 세력 비대칭으로 인한 것이어서 비서방 후발국가는 서방발 근대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위치에서 근대화를 경험했다. 이런 일방성 때문에 서방의 초기 근대화론자들은 근대화가 곧 서구화, 심지어 미국화라고 규정하기도 했다(Levy, 1955; Eisenstadt, 1964). 그러나 실제 근대화의 역사는 일방적 수렴보다는 다양성을 산출함으로써 다중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을 가져와 대안적 근대성의 가능성을 인식하기에 이른다(Eisenstadt, 2002a; 2002b; 2003; Sachsenmaier et al., 2002).

2) 선택적 적응과 선택성의 원리

이러한 대안적 근대성이 성립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선택성의 원리(Principles of Selectivity)가 작용했다. ① 정치적 선택성과, ② 문화적 선택성이다. 정치적 선택성은 외래문화를 접하게 될 때부터 이에 대응하는 자세와 전략을 결정하는데 작용하고 그러한 정치적 결정의 배경에는 문화적 선택성이 개입한다는 원리다. 정치적 선택은 그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적 세력들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개연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유연성이 개입한다. 이런 정치적 결정의 저변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선택성은 문화의 유연성, 개방성, 준비성, 친화성 및 양립가능성 등의 특성에 의해서 상이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적 적응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 부문, 집단과 조직체 등이 서로 다른 이념, 신념, 가치관, 이해관심 등을 둘러싸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상이한 세력과 특권과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갈등하는 결과로 근대화를 토착화함으로써 대안적 근대성이 생성하는 것이다.

시면 제약으로 이 글이 적용하려는 선택적 근대화론의 요지만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소개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자본주의의 생성과 전개 과정 또한 근대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분석하는 작업에 의해서 그 이론적 함의를 되새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III. 동아시아의 제1기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생성

1. 초기 대응의 특징

동아시아 근대화의 시발 시점을 언제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3국이 제국주의 국가와 개항 무역을 위한 조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던 19세기로 보는 것이 필자의 근대화론 관점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 이전에도 이미 16세기부터 근대화를 개시한 서방세계가 동아시아와 외교무역관계를 맺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접촉에 의한 국제적 문화접변이 일어난 시기는 19세기다. 강력한 무력과 경제력을 과시

하며 접근한 서방의 세력에 대한 동아시아 3국의 대응에는 한두 가지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는 쇠국이고, 둘째는 최초의 적응적 변동의 시도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3국은 당시만 해도 중국 중화사상의 영향 아래 외교나 무역을 역내에서만 허용했지 지역 외의 다른 나라와는 접촉을 금기시하고 있었다. 중국은 이념적으로 유교, 특히 성리학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도덕적으로 우수한 중국 외에는 해외는 물론 주변의 나라와 이민족을 모두 야만으로 간주했다. 여기에는 물론 조선과 왜국도 포함했지만, 조선은 그나마 성리학의 정통성에 충실한 군자의 나라로 인정하여 ‘소중화(小中華)’라는 영예를 입었으므로 위정척사의 자세를 고수했다. 일본은 중국이 야만이라 취급했어도 스스로는 신의 자손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심지어 중국보다도 우월하다는 민족주의적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이런 이유로 3국은 공히 서방에 대하여 쇠국을 고수하려 했다.

그러나 국제적 현실은 이러한 국수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힘으로 밀어붙였고, 중국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체면을 손상당하며 결국 문호를 개방했다. 일본은 내부세력 교체에 의하여 스스로 개방을 선택했으며, 조선은 복합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불가항력으로 개항에 동참하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세 나라 모두가 공히 선택적 적응을 시도하려 했다. 여기에도 공통성이 있다. 중국은 중체서용(中體西用), 일본은 화혼양재(和魂洋才) 그리고 조선은 동도서기(東道西器)가 그것이다. 모두가 물질적으로는 서방의 과학기술을 도입하되 정신적으로는 동방의 도를 지키겠다는 적응적 자세다. 여기서부터 세 나라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생성 전개의 도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3국의 자본주의 생성과 전개 과정을 비교·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민간자본 내지 기업부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기실 근대 자본주의 형성 과정의 연구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취급하는 쟁점이 바로 그 과정에 국가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분석하는 일이다. 이런 접근의 논리는 서방의 근대 자본주의 생성 전개 역사에서 기본 요건이 되는 자산소유권, 계약, 중량과 측량의 표준화, 은행과 금융, 보험 등 핵심 경제제도 등을 국가의 규제기구가 지탱하고 있었으며, 국가는 자본주의를 생성시킨 경제 질서의 정당성의 조건을 창출하고 정립한 법률적 체제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생성 전개 과정 또한 국가가 기초가 되어 주는 조건에 관한 관찰을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다(Hamilton 1996: 339).

2. 취약한 국가 개입 아래 생성한 중국 자본주의

중국의 초기 근대화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생성한 배경에는 국가와 시장 간의 연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거기에서 강력하고 자율적인 국가의 작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Hamilton, 1996: 339). 사실상, 유럽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근대화에 시동을 걸고 있을 시점에 중국은 이미 민간부문 경제의 기업인들이 유럽보다도 더 철저히 상업화한 경제를 지속적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상당한 이윤을 취득하기도 했다. 유명한 속설이 이르는 대로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자본주의자들이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시공간을 막론하고 돈벌이에 나서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이미 자본주의 전개를 위한 기초는 일찍부터 닦아 놓았다고 볼 수 있었다(Hamilton, 1996: 331). 그리고 초기 근대화 시기부터 중국사회는 물질적 자원의 희소성이 문제가 아니었고, 사회이동도 비교적 활발했으며, 시장도 비교적 통합이 잘 된 상태에서 사유재산의 보호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아닌 국가부문, 즉 정치 영역이 유일한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었다. 청나라의 정치적 중심으로서 국가는 과도한 권력을 집중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서 국가 외의 어떤 행위자 집단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지방의 군벌들은 자치역량을 발휘할 경험이나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인구를 흡수할 산업이나 상업의 개선은 결여된 채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탱할 수입원은 줄어들어 관료와 군부의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농민을 위시한 대중의 불만도는 견잡을 수 없이 높아가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반란과 혁명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기력을 잃고, 개혁을 실시한다 해도 내부의 각종 정치 세력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형국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9세기 말엽에는 서방의 제국주의 국가는 물론 심지어 일찍이

근대화에 성공한 신생 일본제국마저 막강한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는 이런 대내·외적 위협에 대응할 태세를 구비하지 못한 가운데 국가를 대신할 세력은 물론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조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외침에 의한 전쟁에서도 자체 군사력을 조정하고, 지시하고, 통제할 적절한 행정기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패배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결국, 이 모든 혼돈에 휩싸인 청제국은 이같은 시대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것이다(Ebrey et al., 2009: 304; Worden et al., 1988: 21; Ringmar, 2005: 198-200).

그러므로 중국 자본주의 최초 형성기의 특성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규정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매우 특이한 정치·경제·사회적 기반 위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엘리트에 기초하지도 않았고 명백한 정치적 체제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중국 자본주의를 끌고 간 세력은 농민, 상인, 장인, 또는 학자들이었고, 이들은 뚜렷한 계급으로 조직을 갖춘 집단도 아니었다. 차라리 저들은 “경계가 불분명한 정치적 및 경제적 역할을 오가며 수행하는 가족단위의 세대주들이었다. … 다시 말해서,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제도로써 조직한 경제도 아니었고, … 한 마디로, … 중국 기업의 연결망은 정부의 보호나 정부의 계획과 감독과는 연계가 없이 형성한 현상이었다”(Hamilton, 1996: 334; 341). 그것은 혈족관계를 경제를 위한 조직 매개로 활용하는 가족 기업이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조직으로 존재하는 경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19세기 중국에서도 국가가 소유하거나 상인층이 운영하는 중공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저들이 특별히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Hamilton, 1996: 332, 339). 결국, 자본주의 유형론에 의하면 “중국의 자본주의는 슈피터의 처방보다는 아담 스미스의 논리를 추종한 형태였던 셈이다. 재화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은 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새로운 기술과 기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Ringmar, 2005: 178).

여기서 우리는 중국 초기 근대화 과정의 혼란 속에서도 상업적 활동이 지속했던 것은 국가와 민간기업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 개입한 ‘문화적 선택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상으로 보면 청제국의 관료체제가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이에 경제계의 기업가들은 축재를 위한 사업

을 자기들 나름의 방법과 수단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도덕적 정의를 무시하는 이윤추구를 일삼는 상업행위에 대한 유교적 멸시에 기초하여 아예 주요 상인들을 비생산적인 계급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유교적 정통에 익숙한 지배층의 핵심적인 문화적 관심사는 상업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정치, 사회적 도덕의 문제였다. 따라서 기업부문에 대한 은근한 무관심은 이러한 문화적 원천에서 연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Ringmar, 2005: 174-1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붕괴하고 공공제도는 지리멸렬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에서조차 기업경영부문의 기업가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지속시키고 있었던 현상에 관해서는 일말의 호기심을 거둘 수가 없다. 근대화 초기에는 아직도 지배적인 산업으로서 농업에서는 공업에서 거둘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축재가 어려웠으므로,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경제인들이 공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적 활동을 펼칠 기회가 공간적으로나 부문별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경제인들은 공간적으로는 도시지역, 특히 서방자본가들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있었던 연안 도시지역에서, 그리고 부문적으로는 상업과 서비스 및 기타 공업에서 축재의 기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홍콩, 싱가포르 등 중국 인구가 다수인 지역은 물론 기타 동남아 국가를 위시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나아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까지 이주함으로써 이른바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결국은 20세기 이래 중국 자본주의의 기틀을 만드는 전 지구적 연결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Ebrey et al., 2009: 300). 그러니까 초기 중국의 자본주의는 “강력한 국가의 지원이나 조정 없이” 형성 가능했다는 말인데, 이는 정치 무대나 국가부문에서는 극도로 불안정한 혼란과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이었다(Hamilton, 1996: 336).

실지로 20세기 초반의 20여 년 사이에는 엄청난 정치문화적 혼란 속에서도 중국의 근대경제가 도약을 개시하고 있었다. 당시 해외의 중국인들은 수출업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은 상인, 은행가, 제조업자, 심지어 외국인 기업체 종사자 매판상인들이 구성하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생성을 조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중국의 기업체 규모는 주로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들은 전쟁에 몰두해야 하는 유럽발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일본의 외자도입이 증가하는 데 힘입어 활발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무렵에는 중앙정부의 기력이 거의 무력화해가는 모습이 역력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도시지역에서는 기업인들이 상공회의소와 같은 조직체를 구성하여 도시위생 문제를 비롯해 교육, 심지어 경찰 업무에 이르기까지 도시 자체를 통째로 경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의 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일반적 역사의 흐름에 뿌리를 두고 독특한 유형으로 성장·개발하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Ebrey et al., 2009: 409).

요컨대 중국의 자본주의 형성 전개는 공적인 제도를 대신하는 민간부문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한 공적인 공간이 결여했을 때 저들은 아직도 의지할 곳으로 가족, 친족조직체, 길드와 같은 조합, 심지어 비밀조직체 등에 기댈 수가 있었다. 공적 제도가 무력해지고 불확실성의 정도가 커질 때는 이런 형식의 개인적 관계망이 예측 가능성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제공했던 것이다(Ringmar, 2005: 177-178). 이처럼 가족중심의 경제는 결국 중소기업의 사업체로 구성하는 독특한 기업구조를 자아내었고, 더 성공한 기업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친족과 확대가족의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대규모 기업구조란 대체로 예외라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의 유산상속제도라는 문화적 원천에 기인했다. 중국은 일본처럼 한 명의 자녀 또는 개인이 부모나 업체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장자(일인)상속제를 채택하지 않고 모든 자녀(아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체제에서는 소규모 기업체들이 특수 관계 혹은 연고, 즉 ‘관시(關係)’의 연결망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전략을 쓰게 된다. 물론 이런 관시 연고는 비단 혈연뿐만 아니라 출신 지방, 학교, 기타 동시대 경험 등도 포함한다.

기업부문에서는 이러한 관시 연결망이 생산, 분배 심지어 투자의 그물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다름 아닌 특정한 경제구조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이나 문화적 원천으로 작용하는 보기의 표상이라 하겠다. 이런 형태의 경제가 대규모 중공업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국가의 정치적 선택성에 기초하지 않고 변동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

회에 적응하는 데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 결국, 19~20세기 초 중국의 자본주의적 기업경영의 전개는 세계 경제의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이윤창출에 유리한 구획에서 생태적 적소를 겨냥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Hamilton, 1996: 335-336; 340).

결론적으로, 제1차 근대화 시기의 중국 자본주의는 정치적 선택성의 영향보다는 국가의 상대적 무관심 속에서 민간부문의 가족중심 기업인들의 연결망이 만들어낸 문화적 선택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기업지향적 정치경제와 자본주의 형성

일본에서도 19세기 초부터는 대내·외의 변동으로 불안정과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막부의 집권적 통치 아래 무기력해진 봉건체제는 일종의 피로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이묘(大名)의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전투 없는 사무라이 계급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흉작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빈민은 생계를 위협받아야 하는 국내의 불안정에도, 외세의 위협은 더욱 거세지는 불안상태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막부의 관료체제는 감당하지 못한 채 지방 영주들의 반발이 드높아지는 형국에 이르러 있었다. 이런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막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급 무사들의 반란으로 도쿠가와(徳川) 시대는 막을 내리고 메이지(明治) 천황을 일본국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통치권자로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른바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이다. 그리고 이 정변은 일본사회를 근본에서부터 변혁하는 거의 혁명적인 변동의 시발점이 되었다(Ebrey et al., 2009: 324-337; Gordon, 2003: 33-34; 56-59).

그러한 혁명적 근대화 과업을 이끈 무리는 하급 사무라이 중에서 엘리트 집단으로서 이들 소수의 과두정치 집정자 집단(Oligarch)이었고, 이들은 부국강병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군사기술을 위시하여 산업, 법률 규범, 헌법사상, 과학, 기타 개혁에 필요한 제도적 모델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 내부의 저항과 반발이 없지는 않았지만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형성한 민족주의와 전통적 신도(神道) 종교 및 유교 전통 등에 힘입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개혁에는 속도가 붙게

되었다. 이들이 우선 착수한 것은 자신들이 손수 구미 각국을 순방하면서 선진 서방문물 도입에 앞장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집권 엘리트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공(산)업자본주의의 위력이었다. 이야말로 부국강병의 첩경임을 인식한 그들이 착수하여 달성한 결과가 다름 아닌 일본의 근대자본주의 경제였다(Ebrey et al., 2009: 337-343; 345-347; 373-374; Gordon, 2003: 33-34; 56-59; 70-73; Hamilton, 1996: 333-334; Ringmar, 2005: 193-198; 201).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초기 자본주의 생성이 중국의 예와 정반대의 모습을 띤다는 데 주목하게 된다. 국가의 개입이라는 정치적 선택성과 문화적 선택성의 차이다. 원칙적으로 일본 자본주의는 일본 특유의 정치경제의 소산이다. 기본적으로 서방의 공업기술과 경제조직 원리를 일단 도입하여 일본의 체제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엘리트 집단이 함께 공업화 달성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이 국가의 기구를 이용해 민간의 경제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증진하는 실용적 전략을 채택했다. 이런 방식은 이미 도쿠가와 시대의 영주 독점체제를 운영해본 경험에 기초를 둔 것이었고 막부 시대나 메이지 시대의 국가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지배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제전략의 철학은 오히려 독일의 프레드릭 리스트(Frederic List)의 경제사상에서 차용했다(Hamilton, 1996: 335; Gordon, 2003: 72-73). 요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개발의 일차적 주체는 정치경제 엘리트 집단의 협력적 제휴였다. 일본 자본주의는 일부 엘리트 제휴에 참여한 상인이 있기는 했지만 상인계급의 작품이 아니었고, 농민이 생산 및 노동 산출력을 극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어도 농민의 작품도 아니었다. ... 그것은 정부 통제와 엘리트 특권의 상호보강적인 체제의 산물이었다(Hamilton, 1996: 336).

물론 이 시기의 엘리트 중에는 전통적인 세습적 귀족지위에 의한 엘리트도 있었지만 근대교육으로 지위를 획득한 업적적인 지위를 누리는 엘리트도 섞여 있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근본적으로 엘리트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점이다(Hamilton, 1996: 334). 이렇게 공

업화를 시작한 데는 정부부문의 엘리트가 적극적으로 간여했지만, 경제부문에서도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 형성되어 나타났다. 이들의 대표적 보기가 바로 ‘자이바쓰(財閥)’ 연결망이다. 일단 정치적으로 규정한 자본주의 형식을 띤 일본은 이런 전략에 의해서 소규모 수공업에서 대규모 공업생산으로, 소규모 공장에서 재벌이라는 형식의 대규모 관료적 기업집단체로 성격을 바꾸며 경제개발을 성취한 것이 특징이다(Hamilton, 1996: 334).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메이지 정부는 세입 증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정부개혁을 시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공업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초기에는 민간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부족했고 민간에서는 대규모 과업에 대한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성 탓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진행하자 민간에서도 안심하고 참여해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벌 형태의 기업연결망 형성에는 유럽 후발국가의 예를 따라 자원동원이 신속한 규모의 경제를 선호한 점도 있었지만, 이미 도쿠가와 시대부터 개발한 기업가 정신과 제조업 기술, 그리고 상업적인 금융산업과 연안교통의 발달에도 힘입은 바가 컸다(Gordon, 2003: 98-100).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선택성의 이면에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선택성이 작용하기도 했다. 초기 근대화 과정에 국가가 주도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민간기업 엘리트 사이에서는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추동만큼 국가민족에 대한 봉사라는 신념이 병행되었다. “일본 자본가들은 국가의 관료들처럼 유교적 언어로 표현해서 ‘자기희생적’ 이윤추구라는 철학을 내세우기도 했다”(Gordon, 2003: 99). 그리고 메이지 시대 상인들은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회와 인류와 국가민족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이 그 비결이다.”라는 말을 즐겨 했다(Gordon, 2003: 99-100). 물론 이 같은 희생은 주로 노동자층에게 요구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결과 노동자의 반발로 인한 파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여간, 일본의 초기 자본주의 형성에는 중국과 달리 국가의 개입이라는 정치적 선택성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부문의 기업가 엘리트와 제휴하는 형식의 개발을 추구한 점이 특이하고, 그에 더하여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과 같은 문화적 선택성도 기여했다.

4. 식민지 시대 한국 자본주의의 맹아

근대화 초기 조선조의 자본주의 생성은 시작도 하기 전에 국권상실이라는 비극이 가로막았으므로 동아시아의 다른 두 이웃나라와는 근원적으로 상이한 길을 걷게 되었다. 물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조선에서도 왕의 주도로 미미하나마 자본주의적 경제를 일구려는 개혁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워낙 국내·외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대한제국으로 개명을 하고 황제에 즉위한 고종황제는 미처 손도 제대로 대보지 못한 채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Yi, 2012). 불가피하게 식민통치 아래에서 전개되는 근대화의 일환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시동도 걸린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 제시한 선택적 근대화론에서 볼 때 식민지 근대화도 근대화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여기에는 민족 자율적인 근대화와 타율에 의한 근대화라는 이중적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점은 특히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초기 생성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이 자본주의적 기업활동을 시작한 예가 있었다. 주로 19세기 말 제국주의 국가와 개항조약을 맺은 직후에는 일부 대지주와 상인들이 우리의 곡물을 수출하고 외국 상품을 수입하여 축재를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틀 속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역시 그것은 일본이 먼저 경제개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겠다. 일본의 주된 목표는 본국의 근대화의 일환인 공업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식민지에서 하는 일이고, 그 이면에는 동북아시아로 식민지를 확대하는 목표와 더 나아가 미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경제 지원 방향으로 식민지경제를 정착시키려는 궁극적 목적이 숨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조선인의 공업화 경제는 극히 한정적인 수준에서만 허용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 자체의 공업화 과정에서 취한 태도보다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자세를 취했다(Kim, 2006: 103-105; Savada and Shaw, 1992: 139-140).

그와 같은 제한적인 기회나마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한 기업가들 중에는 비교

적 대기업을 일구는 데 성공한 사례도 소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일본 식민정부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제약이 따랐다. 대다수 상공인의 기업체는 중소 규모이고 사업 분야도 문호가 넓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식미지가 끝나갈 무렵에는 자본주의의 싹이 트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 일부 기업가들은 성공하여 현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을 운영하는 삼성, 현대, LG 등의 재계 지도자도 있다(Baek et al., 2011; Ebrey et al., 2009: 393-394; Eckert, 1993: 98-99; Hwang, 2010).

IV. 동아시아의 제2기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전개

여기서 말하는 제2기 근대화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를 가리킨다고 했다. 이러한 두 시기 구분의 정당성은 우선 그 두 시기 사이에 세 나라 모두가 심대한 역사적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전쟁이 개입한다는 점이고, 이어서 그러한 단절을 겪은 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질서의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이런 현상은 어떤 의도적 계획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우연의 결과지만, 이 지역의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전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중국은 이 시기에 두 개의 전선에서 투쟁을 해야 했다. 하나는 일본의 침략이라는 대외적 전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였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주범이었다가 패전국으로 전락해야 했고, 한국은 식민지에서 광복을 찾는 순간부터 민족과 국토의 분단을 맞이해야 했다. 그러므로 제1기에 시작했던 근대화는 이때부터 다시 시도해야 하는 맥락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것처럼 달라진 맥락 속에서 자본주의의 진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1. 세계대전 직후의 맥락

우선 태평양전쟁 직후의 맥락 자체를 간추릴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가 주제

인 만큼 중국에 관해서는 종전 직후의 사회주의 시기를 일단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 마오쩌둥(毛澤東) 사후를 기점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론으로 알려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념을 실천하는 때부터 검토하게 된다(Vohra, 2000: 289). 일본은 전쟁 중에 공장과 기타 산업 인프라의 40퍼센트가 부서졌고, 산업생산도 약 15년 전인 193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 전 후에는 거의 밑바닥에서 재출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Dolan and Worden, 1992: 199-200).

한국은 사정이 훨씬 더 복잡하다. 광복 직후 맞이한 분단 속에서 일본 국민이 철수한 공장과 기업체 등에는 관리자, 기술자, 운영자원 등이 부족한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만연했고, 국가경영 경험이 없는 외국 군대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상황이 참으로 혼란하기 그지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동아시아 3국의 종전 후 근대화 과정 속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2.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선택성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를 중국 외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비록 마오 사후에 실질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여 놀라운 성장을 성취했다 해도, 최소한 공식적 이념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할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며 강력하게 통제하는 사회가 중국이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자본주의를 논할 지를 따지기로 들면 당혹스러운 자가당착에 직면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시장경제를 이론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면 이 또한 모순을 내포하는 용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의연하게 그 노선을 견지하며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보다 더 정치적 선택성이 뚜렷하게 작동하는 사회가 다른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덩샤오핑이라는 정치 지도자의 실용적 철학이라야 설명이 가능하다.

그가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고 대중 앞에 나설 때 내세운 구호는 ‘4대 현대화’,

즉 농업, 공업,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의 현대화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내세운 이론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였고, 이는 그의 거대한 비전인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中國特色的 社會主義)’ 혹은 중국적인 특성을 지니는 사회주의를 세우는 과업의 이념적 표현이었다. 물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순전히 자본주의에 명분을 얹어 주려는 수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다.

사람들이 개혁을 실시하고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지 건설을 주저하는 이유의 요체는 그것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려는 의도, 곧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려는 뜻이라는 우려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것인데, 이런 판단을 할 때 최고로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을 키우느냐, 사회주의 국가의 전반적 힘을 증대시키느냐, 그래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우리는 외국 자본이 투자하는 부문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규모, 중규모 국영 기업체들과 농촌 기업체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정치적 권력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Vohra, 2000: 289).

이와 같은 이론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정치 권력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고 1982년 헌법에서도 “국가는 나라의 경제개발을 지도하고 국가위원회는 국가경제계획과 국가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하부 기관들을 지휘한다. …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직접 통제의 사용을 축소하고 간접적 경제 지렛대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라고 적시했다”(Worden et al., 1988: 228-229). 위의 인용문에서 밝힌 대로 덩샤오핑은 정치적 권력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념의 배경에는 민족주의라는 문화적 선택성이 자리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시장경제를 실현하면 분업과 사회분화 및 이에 따른 자율성의 요구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만일 이를 방지하면 사회적 무질서와 해체마저 올 확률이 높다. 이때 민족주의만큼 응집과 협동과 희생을 요구하기 좋은 명분이 별로 없다. 실지로 이와 같은 개혁 프로그램 실행의 결과를 일별하기만 해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간략하게나마 덩 사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전개 과정을 돌아본다.⁵

⁵ 이제부터의 논의는 다음의 원천에 의존함을 밝혀 둔다. Baek(2007); Ebrey et al.(2009: 474-

최근 수십년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중앙의 당과 국가의 실질적 통제가 특히 경제부문에서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도 곧 자본주의 경제의 이념을 추구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획득한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 중국공산당이 아직도 국가부문의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강제 수단을 제어하고 있는 한 그런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경제 권력은 불가피하게 정치 권력과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국가기구 내부의 하급 관료들의 자율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아마도 장차 중국 자본주의 경제의 전개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추정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집단농업을 해체하고 개별세대 책임제가 등장했다. 이로 인해 농업이 분화하고 토지가 없는 농민이 분해하는 대신 특별한 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면서 국가의 계약을 충당하는 대규모 토지 소유와 자발적 농업협동조합을 허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현직 당 기간요원들은 농민세대와 외부 사이의 중재를 담당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 또한 농가는 각자 비농업직에 종사할 자유를 얻어서 빠르게 확장하는 농촌공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동시에 과거의 코문과 같은 집단기업체도 해체하여 소유는 공유제로 하되, 경영은 개인 민간이 위탁관리하게 했다. 그리고 일상의 행정책임은 향촌(鄉村) 정부에 맡겨 이런 것들이 소위 향촌기업(鄉村企業, TVEs: 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이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초에는 이런 기업체가 100만 곳이 넘어 중국 전체 산업고용의 4분의 1에 가까운 정도에 이르렀다.

이들 향촌기업은 구매, 판매, 고용 등의 기능을 해당 지방의 경계를 넘어 작동하는 시장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일종의 ‘지방국가조합주의’ 내지 ‘지방시장사회주의’를 형성하여 지방정부가 마치 복합적 산업기업체처럼 재산 소유권을 갖고 경영관리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 구실을 하게 되었다. 당의 기간요원들이 이런 회사의 경영자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흥미있는 현상은 그러한 지방조합주의 체제가 그 지방의 친족 연결망에 배태하여 당

해 지역의 유력한 가족 구성원들이 그런 조직체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묘한 정치적, 문화적 선택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사기업의 도입이 재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의 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주요 형태는 ① 국가소유기업체, ② 외국 투자 기업 등의 반공영기업체와 향촌기업체, ③ 제조업부문의 대규모 사기업체, 그리고 ④ 소매업, 식품, 수선, 기타 큰 고정자본을 요하지 않는 분야에서 번성하는 자영업체인 ‘게티후(個體戶)’라고 한다(Baek, 2007: 175-178). 시장경제를 시도하던 초기에 처음 등장한 사기업체가 이들 게티후인데, 이들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안 되고, 농촌의 생산 활동에 자본을 유입하며, 도시의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중공업에 뒤지는 3차 산업의 개발을 장려하며, 공기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 중에 일부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에는 이런 게티후 형태의 가족회사가 수백만에 이르렀고, 나머지 규모가 더 큰 기업체도 수십만으로 늘었다(Stockman, 2004: 139).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국가 소유 기업체들은 심각한 비효율성으로 인한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저민(江澤民)은 “국민경제의 생명의 근원인 주요 산업에서 국유부문이 주종을 이루어야 하기에 대중 규모의 국유기업체들은 시장적응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소유권, 제대로 규정된 권력과 책임, 경영관리와 국가행정의 분리, 그리고 과학적 경영 등의 필요조건에 의거하여 표준 기업체가 되도록 변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Vohra, 2000: 292).

그처럼 국유기업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덩 사후에도 사정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은 한층 더 심층적인 분석 위에서, 국가의 국유기업체 소유권 장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청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관료와 사기업의 기업가 사이의 관계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게티후와 같은 가족단위 기업체는 정부 관료의 후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에, 대규모 기업체는 사기업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간섭할 수 있는 관료들과도 친밀한 관시 연줄을 맺고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당 기간요원들과도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의존관계

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은 상호 보호자-고객의 관계에서 서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은 기업을 보호하고 특전을 베푸는 대가로 뇌물, 상납금, 고용기회 또는 동업 등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부패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러 중국 당국의 지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 문제는 사실 “명목상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회주의 정당이 정치권력을 집중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이윤추구를 하는 경제기구와 행정기구들은 더 분권화하고 자율성을 조장하는” 체제 자체의 모순에서 초래된 현상이다(Vohra, 2000: 295). 바로 이 자율적인 이윤추구 부문에서 윤리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문제다. 여기에는 중국 특유의 문화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선택성을 초월하는 문화적 선택성의 작동원리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중국인의 생래적인 ‘자본주의적’ 성향이 이들로 하여금 기회만 있으면 “돈벌이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가게” 유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Vohra, 2000: 294). 실지로 수천만 명의 정부관료와 당료들이 돈벌이를 위해 직장을 떠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직을 유지하기로 작정한 이들 중에는 사적인 사업을 위해 공적인 업무까지 게을리함으로써 관청과 학교에는 인원 부족을 초래할 지경이다. 이런 사태는 다음과 같은 보기에서 알 수 있다.

경찰관은 매춘 포주 노릇을 하고, 공장 근로자는 길거리에서 걸레를 흔들며 세차 고객을 하며, 대학생들은 구전을 받고 복사기나 X-선 기계를 판매하고, 교수들은 기업 자문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최근 『경제일보』에서는 교수가 차고 다니는 호출기가 올리면 급히 교실을 빠져나간다는 불평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군부대도 뒤질세라 자체 공장기업소를 2만 곳이나 설립했다. 이처럼 열광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이념이 희석되고 있으며 부패와 범법 사기행각이 크게 늘고 있다(Vohra, 2000: 294).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중국 자본주의의 특징이 내재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지배하는데 경제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 정부의 통제도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더구나,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감독도 — 최소한 개혁 주창자들의 의식 속에는 — 직접 억제하는 국가의 통제 방식에서 한층 더 역동적인 경제에 대한 간접적 지도의 방향으로 변했다(Worden et al., 1988: 230-231; Baek, 2007: 181). 최근에 중

국에서는 실지로 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권력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업 형태의 다양화와 경제의 시장화 등 경제부문의 변화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은 더욱 더 중앙정부 권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당과 정부 기구 내부에서도 부하들에게 돌아가는 사회경제적 보상을 두고 상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지방에서는 당 기간요원들이 경제 조직체들과 수익이 많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증가하므로 젊고 유능한 요원들은 그런 혜택을 찾아 지방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과 국가의 조직 역량이 상당히 약화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하여 국가권력 자체의 감소로 이어지는 모습이다(Stockman, 2004: 145).

시장부문에조차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가령 자본주의 하면 주식시장을 떠올리는데, 중국도 1990년대 초에 일부 기업체는 주식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주요 주주는 아직도 국가기관이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경영자와 근로자들에게 주식을 배당했지만 이는 내부용이지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주식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지만 자본시장의 성장이 직접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아직은 대규모 소유권의 양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힘이 부분적으로 분산된다는 것을 암시할 따름이다. 한편, 기업조직체 내부에서는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용으로 보유하는 등의 일상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영자들의 자율권이 증가하는 추세다. 제한적이긴 해도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로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간다. 심지어 국유기업체의 파산조치도 허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가권력의 감소 추세는 명백한 것 같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주로서 국가기구와 규제자로서 국가 관료들이 계속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정치 권력이 아직은 경제 분야에서 완벽하게 철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Stockman, 2004: 140-141).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전개하는 역사를 보면 흥미롭게도 초기의 공식 이념인 사회주의의 문화적 선택성이 정치적 선택성을 지지했으나 새로이 생성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와 작동 기제로 말미암아 정치적 선택성은 이제 문화적 선택성의 영향 아래 흔들리기 시작한 듯이 보인다. 이처럼 중국이

계속 선택적인 적응적 변동을 불가피하게 시도하면서 현재의 근대화 과정을 추진할 때 정치경제의 변화는 어떤 성격을 띠게 될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정권이나 정당이 직면해야 할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심화되는 자원배분의 불평등,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증대하는 시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 그리고 표면상 평온해 보이는 사회변동의 저변에서 부글거리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개연성 등은 중국의 특이한 자본주의가 이 사회의 미래를 규정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해야 할 요소들이다.

3.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대국, 일본

전후 일본의 자본주의 전개를 이해하려는 이 글에서는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점령군으로 진주한 맥아더(Douglas McArthur) 장군의 전후 일본 경제 개혁에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먼저 일본군을 무장해제한 당시 최고사령관의 일본 개혁 프로그램은 헌법 개정, 토지개혁, 교육개혁 및 경제개발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1952년 최고사령부 해체에 이르는 시기까지 경제개혁이 담았던 내용은 주로 네 가지였다. ① 1950년까지 90퍼센트의 농지를 자경농가에 배당하는 토지개혁, ② 전쟁 수행에 기여하고 내재적으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지배하던 자이바쓰(財閥) 해체, ③ 노동조합의 설립과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그리고 ④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관료체제의 통제권한을 전보다 더 강화하기 등이다. 다만 1948년에 이르면 냉전체제의 정착 아래 노동조합의 폭력성과 집단행동을 우려한 나머지 최고사령부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 금지와 재벌 해체 중지를 위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했다. 전후 초창기에는 소실된 산업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투자가 시급했으므로, 통상산업성(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으로 하여금 일본개발은행이 정부의 우정 서비스로부터 대출을 받아 민간기업에 대여하도록 하고, 동시에 일본은행도 민간은행에 용자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Dolan et al., 1992: 200; Ebrey et al., 2009: 449-450).

이렇게 시작한 일본의 전후 경제성장은 이미 역사의 사건이 되었으므로 자세

한 해설은 필요 없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정부의 역할과 국가와 민간부문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을 시작하기로 한다.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는 도쿠가와 시대에 갖춘 사회경제적 기초 위에 메이지 시대의 공업화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자리 잡았고, 그 바탕 위에 아시아의 식민지 전쟁과 미국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한 기초를 재건하면서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일어난 한국전쟁과 베트남의 대미국 전쟁의 덕을 보면서 일본 경제는 연간 평균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성취했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일본 경제의 성장은 정부의 개입과 지원 아래 민간의 재벌이라는 경제집합체가 동업자로 동참하면서 일구어낸 결과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일본 자본주의 전개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료한 논지가 있다.

비록 일본의 경제개발은 일차적으로 민간 기업가정신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나라의 번영에 직접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행동은 새로운 산업의 시발을 도왔고, 경제불황의 영향을 완화시켰으며, 건전한 경제적 인프라를 창출했고, 시민의 생활 수준을 보호했다(Dolan et al., 1992: 204).

이와 같은 정부의 자세는 실상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의 유학은 무사사회의 질서유지에 핵심적인 덕목으로서 충(忠)의 도덕을 중시했고, 리더십과 권위가 국가로부터 파생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민간의 기업부문은 지도력과 지도를 국가가 발휘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한 신념 위에 국가도 하나의 가족이라는 관념이 겹치면서 정부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기업은 자체의 이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의 복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논리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막강한 국가를 이룩하려면 모든 국민이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요청하게 된다(Dolan et al., 1992: 205). 여기에 우리는 일본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선택성과 문화적 선택성이 절묘하게 교합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을 더 분석하기 전에 먼저 민간부문의 기업가정신의 성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일본의 기업가정신의 씨는 이미 도쿠가와 시대의 장구한 평화체제 아래에서 할 일을 잃었던 저급 사무라이, 도시의 상인, 그리고 농촌의 부농 집단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이를 이어받은 메이지 공업화 과정에서는 특히 재벌집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부문에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육성한 것이다. 전술한 대로 종전 직후에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전시 경제체제의 최고경영자들과 해체한 재벌기업의 중역들을 전쟁지원기구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숙청한 바 있었다. 그러다가 냉전 시대 소비에트 체제 아래 있었던 중공과 북한 공산정권의 위협을 우려한 맥아더 장군이 이러한 정책을 반복하고 이전에 숙청했던 정치인, 관료, 기업인 등을 원상 복귀시키고 재벌 해체를 중지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복귀도 중요하지만 전시 기업인들이 숙청당하던 시기에 적극적인 젊은 기업인들이 새로이 등장하게 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선배들의 빈자리를 채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자신의 사업을 따로 시도하고자 회사를 신설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이들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은 일본 관료들이 암시장에 내다 팔아먹거나 사업하는 연고자들에게 팔아넘긴 건설기계와 자재를 포함하는 정부 자산의 일부를 싸게 매입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새로운 분야에서 신기술에 도전하는 모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정부 관료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새 사업을 추진한 부류도 있었다. 이들은 은행에서 거금을 대여받거나 융자하면서 전후 일본의 민간기업이 빠른 속도로 맹렬하게 확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Ebrey et al., 2009: 450; Gordon, 2003: 248). 일본 정부는 이런 종류의 민간기업인들과 손잡고 전후 경제복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던가? 이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소비에트 식의 ‘명령경제’를 운영한 것이 아니었다. 민간기업들은 때로 공공기관의 충고를 어기면서까지 중요한 창업에 도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전후 경제개발은 단순한 자유시장 경제로만 진행되지는 않았다. 전쟁 전부터 전시 중에 급조한 실전에서 파생된 국가경영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실천을 요약하여 ‘산업정책’이라 이름 붙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정책수단이 실효성 있는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Gordon, 2003: 249).

전후 점령시기에 일본 정부는 SCAP의 도움으로 외환이나 기술 라이선스 같은 주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민간기업의 벤처 사업들을 지원하거나 폐기하는데 지렛대로 활용했다. 전후 초기에는 공식적 권위를 누리는 공직자와 정부가 주요한 구실을 해주었는데, 그 후로는 법률에 명기되지 않은 비공식적 실행으로 인해 무게중심이 국가의 비공식적 개입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행정지도(行政指導)’라 일컫는다. 가장 유명한 행정부처가 다름 아닌 MITI인데, 일반적으로 말해 정부기구는 일종의 경제적 ‘응원단’이나 ‘길잡이’에 해당하는 구실을 했다. 가령 5개년계획이 나왔다면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MITI는 대부업자로서, 외환, 원자재, 기술 라이선스 등에 접근하기 쉽게 인도하는 대행자로서, 그리고 문제 발생 시 구조자로서 나설 준비태세를 갖추고 기다렸다. 좀더 친근한 수준에서는, 국가기구의 한 부서가 엔화를 수입에 필요한 달러로 환전하는 일을 처리해주고, 일정한 품목의 수입을 금지시키기도 하며, 저리의 용자도 제공하고, 세금 감면도 해주는 등 신생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일도 했다. 이 같은 행정지도의 비공식적 메커니즘은 전시 정치경제의 초석이었지만 이제 전후에는 강제성이 적은 설득 형식으로 작동하는 ‘관리형 자본주의(managed capitalism)’로 더욱 개발시켰다(Dolan and Worden, 1992: 204-207; Gordon, 2003: 249-250). 이런 식으로 “이들은 시장이 정부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보상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정부와 기업가들의 상호작용이 더욱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Gordon, 2003: 251).

중국은 19세기의 제1기 근대화와 20세기 제2의 근대화 시대 사이에 상당한 괴리와 단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본은 그 두 시기를 넘어 심지어 막부 시대의 유산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게 작용한 흔적이 있을 만큼 연속성의 모습이 눈에 띄는 점이 특이하다. 물론, 메이지 유신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장애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끈질긴 연속성은 아마도 일본의 민족주의, 즉 천황 중심의 국수적 민족주의 탓이 아닌가 한다. 심지어 21세기 까지도 여전히 전전의 군국주의 사회로 회귀하려는 보수정치가 판을 치는 모습은 사뭇 염려스럽기조차 하다. 어쨌든 정치적 선택성마저도 압도하는 문화적 선택성의 위력은 가히 놀랍다. 자본주의도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것 같은 인상마저 갖게 하는 경로를 밟아 생성·진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4. 한국의 혼합형 자본주의 형성

한국의 자본주의 발생과 전개 과정은 상세한 논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서 의지하는 선택적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잠시 되돌아보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일단 우리가 다루는 제2기 근대화의 시발점은 1945년이지만 실제로 자생적인 근대화에 착수하기 시작한 시기를 따로 잡자면 아무래도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장군은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섯 가지 혁명 공약 가운데 ‘빈곤 퇴출’ 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하므로 당시 유행하던 경제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마침내 1962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물론 경제계획 수립 과정은 이미 자유당 시절부터 시도했고 4·19 혁명으로 실현하지 못한 경제개발 계획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시행하려 했으나 역시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하게 된 역사가 있다(이한빈, 1968).

이때부터 개시한 경제개발은 한국의 제2기 근대화를 대표하는 변동의 한 축이다. 한국의 토착적 자본주의가 싹트고 꽃피도록 씨를 뿌리고 가꾸어 마침내 세계적 수준의 상당한 경제를 일궈낸 것도 그러한 근대화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우선 근대화를 시작하는 데에는 외적 요인으로서 국제적 문화접변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 요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라는 말 자체를 포함해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 자원을 제공해준 세계 차원의 변천이다. 그 내용을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문화접변을 수용하는 주체가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고 근대화의 주동자도 한국인이었다는 전제가 중요하다. 여기에 바로 정치적 선택성의 중요성이 떠오른다. 이 점을 적시한 학자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남한의 선택적 모방과 수출지향적 전략은 지난 40여 년에 걸친 비교적 성공적인 경

제성장을 성취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과거의 유산으로서 지배적인 사회구조는 남한이 먼저 공업화를 경험한 나라의 공업화와 개발과 동일한 유형을 추구하기는 어렵게 한 점이 있다. 개발의 전략은 결국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Kim, 2006: 108).

그러면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의 적응적 변동을 위한 선택을 요약하면 ‘수출주도적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 전략이었다.⁶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면 한정적인 내수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고, 수출을 하려면 농업의 효율성은 너무도 저조하므로 공업화에 의한 상품 생산이 필수다. 이를 위한 자본은 주로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국내 저축률도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이었다. 수출을 주요 수단으로 삼지만 초기에는 우선 수입 대체 공업화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중화학 공업을 거쳐 첨단 산업으로 이행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한 데에는 우리에게 유리한 생산과 소비의 국제적 분업체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취지를 담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주체는 국가부문이고 주된 기간산업은 공기업이 맡았으나 수출품 생산의 전초기지는 역시 민간기업부문이었다. 그리고 이 과업을 수행할 경제 주체 역시 그 동안 자생적으로 형성해오던 재벌형 대규모 기업체를 동원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국가는 정책 수립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본축적, 중점 개발 산업 선정, 공업화 기지 지정, 가격, 세금, 관세 등등 모든 주요 정책과제를 잘 교육받은 국가부문의 관료집단이 결정했다. 그 관료집단의 중심에는 새로이 설치한 경제기획원이 움직이고 있었다. 요컨대 국가주도의 정치적 선택성이 우세한 개발 전략이었다(Savada and Shaw, 1992: 143-144; Steinberg, 1988a).

특히 재벌기업의 참여에는 강력한 정치적 선택성이 작용했다. 향도자본주의 기치 아래 국가는 주요 기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정 기업체를 선정하여 외채와 기타 국내 은행권의 자본을 제공하고 채무는 국가가 보증하기로 약속했다(Eckert, 1993; Lie, 2006; Savada and Shaw, 1992: 147-148). 결국, “국가의 보호와 사회적 연결망이 재벌의 성장을 형성했다. 이러한 재벌 성장을 설명하는 데서 설립

⁶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전략과 성과에 관한 문헌은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Amsden(1989); 김경동(1992); Kim(2006);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2010); Kwack(1994).

자 기업인의 철두철미한 기업가정신이 주된 요인이라는 논리는 정확한 답이 아니다. 물론 저들은 영리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지만 적어도 1960~70년대 재벌기업의 지위를 얻는 데에는 정치적 특전을 유도하는 특출한 능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Lie, 2006: 143) 물론 이 과정에는 소위 ‘정서적 연결망(affective networks)’이라는 이름의 정경유착이 작용하는 문화적 선택성이 작용했다. 마치 중국의 관시와 일본의 ‘엔코(緣故)’와도 유사한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특징을 더 강하게 반영하는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다(Kim, 1976; Lew, 2013).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의 재벌과 일본의 자이바쓰를 비교해 본다. ① 일본의 재벌은 전후 개편 과정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체들이 연합하는 ‘계이레쓰(系列)’ 시스템으로 재편했다. ② 재벌은 가족지배구조의 대규모 기업체지만, 계이레쓰는 전문적인 기업경영체가 통제한다. ③ 개개 재벌은 은행의 주식을 매매했을 수 없고 은행과 배타적 특수관계를 맺지 못하게 규제한다. 다만 거래은행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어 여신에 제약이 별로 없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④ 재벌기업들은 수출용 자가 생산품의 부품을 계열사를 설립하여 제조하는 데 비해, 일본 기업체들은 대개 외부 하청에 의존한다(Dolan and Worden, 1992: 202; Savada and Shaw, 1992: 148; Steinberg, 1988b).

여하간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을 추구하려면 사기업과 국민의 협조도 얻어야 하는데, 저들의 동원에는 부득이 문화적 선택성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우선 위에서 개관한 전략의 내용을 이념적으로 축약하여 ‘향도자본주의(Guided Capitalism)’라 일컬었다. 실제 경제행위는 경제 주체인 기업부문이 책임지지만 주요 정책 기조와 방향 및 구체적 제도 등은 국가의 손으로 정하여 지도하는 국가-민간기업의 협업적 조합을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일종의 ‘국가 자본주의와 자유기업’의 혼합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성취하려는 목표는 ‘조국의 근대화’였다(신범식, 1965).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제일주의’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희, 1963). 이런 과정에서 소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정치의 조속한 발전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두고 한국의 개발지향적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 산

업정책의 유산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심지어는 전후의 일본 경제개발 모델을 채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는 관료적 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기도 한다(Chang and Lee, 2006; Ebrey et al., 2009: 391; Kim, 2006). 어떻게 명명하든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개발 과정에 국가가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3국의 자본주의는 각기 특이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만은 틀림없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정치적 선택성과 문화적 선택성의 원리가 개입하는 한 유사성과 차이점은 공존하게 마련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근대 자본주의가 생성·전개하는 양상이 아마도 세계의 지역마다, 나라마다, 또 시대에 따라 다양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사실이라면 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당연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론적 해명의 한 접근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작업을 주로 시도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3국, 즉 중국, 일본, 한국(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생성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 틀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한 것이다. 그 이론은 선택적 근대화론이고, 세 나라의 자본주의가 이러한 근대화의 한 주요 구성 요소로서 생성·전개해나가는 모습을 점검하고자 했다. 우선 외부에서 몰려오는 국제적 문화접변에 대응하여 각기 적응적 변화를 시도할 때 정치적, 문화적 선택성이 개입하여 자본주의의 특성이 공통 혹은 상이하게 드러나는 양상을 띠는지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적 근대화의 결과 적응적 변화에 의한 근대화의 토착화를 겪은 결과를 근대성이라 보는 이론이다.

여기서 분석의 초점은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국가와 민간기업부분 간의 관계는 어떤 성질을 띠는지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근대화가 19세기에 일차로 관찰할 수 있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근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 이 두 시기마다 세 나라의 자본주의가 어떻

게 생성, 전개하는지를 비교·검토하고자 했다. 특히 제1기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자본주의는 거의 국가의 개입 없이 가족단위로 형성·진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는 매우 체계적인 국가부문의 엘리트가 적극적으로 메이지 천황을 옹위하고 근대화에 나서면서 국가와 민간부문의 엘리트가 협동하여 일본 나름의 자본주의를 전개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한편 조선조는 거의 붕괴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침투에 직면했으므로 본격적인 자본주의 형성 자체가 불가능한 가운데 식민지 치하에서 겨우 싹이 트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태평양전쟁 종식 후 중국은 사회주의로 방향을 틀었으므로 1970년대 후반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의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의 특이한 한 형태로 간주하고 거기에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 또한 패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배 아래 토지개혁, 재벌 해체 등 근대화를 시도하다가 냉전체제의 정착으로 인해 개혁은 일단 중지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 아래 새로운 엘리트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건설을 추진하여 일약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특징을 분석했다. 한국은 광복 후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혼란한 가운데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세력이 ‘향도자본주의’ 기치 아래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조하는 혼합형 자본주의를 형성해 온 것을 추적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적응적 변동을 경험하는 가운데 정치적 선택성과 문화적 선택성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주목했다.

물론 자본주의 연구를 이러한 근대화 과정의 변화라는 맥락에서만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실상 역사적으로 근대자본주의는 근대화의 한 구성요소처럼 동시에 형성, 전개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 새로운 이론적 시도를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지면을 허용한다면 현시대 동아시아 3국의 자본주의 조직 원리를 경영조직 및 노사관계와 같은 부문에서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거기까지 미쳐 손대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 글에서 소개한 선택적 근대화론이 자본주의의 생성 전개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나름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면 다행일 것이다.

투고일: 2015년 12월 11일 | 심사일: 2015년 12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15일

참고문헌

- 김경동. 1992.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서울: 박영사.
- _____. 1993. 『한국사회변동론』. 서울: 나남.
- _____. 2002. 『한국사회발전론』. 서울: 집문당.
- 김경동 외. 1985. 『한국사회 한 세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정희. 1962.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서울: 동아출판사.
- _____. 1963. 『국가, 혁명, 그리고 나』. 서울: 향문사.
- 신범식. 1965. 『조국 근대화』. 서울: 동아출판사.
- 이한빈. 1968. 『사회변동과 행정』. 서울: 박영사.
-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 60년사』 전 5권.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Amsden, Alice. 1989. *Asia's New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ek, Okkyoung Jihyun, Cho, Dongju Ham, Byungjoo Jung, Hynsook Lee, and Jungsook Sohn. 2011.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Edison, NJ: Jimoondang.
- Baek, Seung-Wook. 2007. "The Emerging Capitalist Spirit of Private Enterprises in China: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Kyong-Dong Kim and Hyun-Chin Lim, eds. *East Meets West: Civilizational Encounter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East Asia*, 175-191. Leiden and Boston: Brill.
- Black, C. E. 1966. *The Dynamics of Modernization: A Study in Comparative History*. New York: Harper & Row.
- Chang, Yun-Shik and Steven Hugh Lee, eds. 2006. *Transformations in Twentieth Century Kore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iot, Daniel. 1994. *How Societies Change*.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Dolan, Ronald E. and Robert L. Worden. 1992. *Japan: A Country Study*. Fifth ed.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 Ebrey, Patricia, Anne Walthall, and James Palais. 2009. *East Asia: A Cultural, Social,*

- and Political History* 2nd Ed. Belmont, CA: Wadsworth.
- Eckert, Carter J. 1991.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84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_____. 1993. "The South Korean Bourgeoisie: A Class in Search of Hegemony." In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95-130.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isenstadt, Shmuel N. 1964. "Breakdowns of Modern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2(4), 345-367.
- _____. 1966.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 2002a. *Multiple Modernit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_____. 2002b. "Some Observations on Multiple Modernities." In Dominic Sachsenmaier, Jens Riedel, and S. N. Eisenstadt, eds. *Reflections on Multiple Modernities: European, Chinese and Other Interpretations*, 27-41. Leiden: Brill.
- _____. 2003. *Comparative Civilizations and Multiple Modernities*. Leiden: Brill.
- Gordon, Andrew. 2003. *A Modern History of Jap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Stuart, David Held, Don Hubert, and Kenneth Thompson. 1996.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Modern Societies*.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Hamilton, Gary G. 1996. "Overseas Chinese Capitalism." In Tu Wei-ming, ed.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328-34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wang, Kyung Moon. 2010. *A History of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ambhampati, Uma. 2004. *Development and the Developing World*. Cambridge, UK: Polity Press.
- Kim, Kyong-Dong. 1976. "Political Factors in the Formation of the Entrepreneurial Elite in South Korea." *Asian Survey* 16(5): 465-477.
- _____. 1977. "The International Dynamics of Modernization: Some Theoretical Issues and Humanistic Concerns." *Journal of the National Academy of*

- Scie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ries* 16, 277-306.
- _____. 1981. "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 in Asian Development: A Conceptual Framework." The Third Conference of Asian Sociologists. Tokyo: October 11-13.
- _____. 1985. *Rethinking Development: Theories and Experienc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_____. 2005a. "Modernization as a Politico-Cultural Response and Modernity as a Cultural Mixture: An Alternative View of Korean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Society* 34(1), 1-24.
- _____. 2005b. "Alternative Modernities Emerging via Selective Modernization: The Case of the Two Koreas." The Workshop on "History of Modernity Reconsidered: East Asian Paths and Patterns" of the 2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Historians. July 3-9,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 _____. 2008. "Selective Modernization and Alternative Modernities: In Search of an Alternative Theor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7(2), 105-161.
- Kim, Kyong-Dong and Lee On-Jook. 1983. "The U. S. Educated among the Korean Politico-Bureaucratic Elite: An Aspect of American Socio-Cultural Influence." *American Studies* 6, 53-69.
- Kim, Kyong-Dong and On-Jook Lee. 1987.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Korean Elite: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Kyong-Dong Kim, ed. *Dependency Issues in Korean Development: Comparative Perspectives*, 434-458. Seoul: SNU Press.
- Kim, Kyong Ju. 2006. *The Development of Modern South Korea: State Formation, Capitalist Development and National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Kumar, Krishan. 1995. *From Post-Industrial to Post-Modern Society: New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World*. Oxford, UK &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Kwack, Sung Yeung. 1994. *The Korean Economy at a Crossroad: Development Prospects, Liberalization, and South-North Economic Integration*. Westport,

- CT: Praeger Publishers.
- Levy, Marion J. Jr. 1955. "Some Social Obstacles to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Areas." In M. Abramovitz, ed.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Princeton, NJ: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Lew, Seok-Choon. 2013.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al Path: Confucian Tradition, Affective Network*.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ie, John. 2006. "What Makes Us Great: Chaeböl Development, Labor Practices, and Managerial Ideology." In Chang Yun-Shik and Steven Hugh Lee, eds. *Transformations in Twentieth Century Korea*, 138-152.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artinelli, Alberto. 2005. *Global Modernization: Rethinking the Project of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 McNamara, Dennis. 1990.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1910-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Neil, William H. 1986.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A Handbook*. Sixth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ore, Wilbert E. 1965. *The Impact of Indust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orishima, Michio. 1982. *Why Has Japan "Succeeded"? Western Technology and the Japanese Etho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ngmar, Erik. 2005. *The Mechanics of Modernity in Europe and East Asia: The Institutional Origins of Social Change and Stagnation*. London: Routledge.
- Sachsenmaier, Dominic. 2002. "Multiple Modernities — The Concept and Its Potential." In D. Sachsenmaier, J. Riedel, with S. N. Eisenstadt, eds., *Reflections on Multiple Modernities: European, Chinese and Other Interpretations*, 42-67. Leiden: Brill.
- Sachsenmaier, Dominic, Jens Riedel with Shmuel N. Eisenstadt, eds., 2002. *Reflections on Multiple Modernities: European, Chinese and Other Interpretations*. Leiden: Brill.
- Savada, A. M. and W. Shaw. 1992. *South Korea: A Country Study*.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 Shin, Gi-Wook and Michael Robinson. 1999.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Steinberg, David I. 1988a. *South Korea's Economy: Past Successes, Future Prospects: A Background Report*. New York: Asia Society.
- _____. 1988b. *Chaebö: Engine of South Korea's Growth: A Background Report*. New York: Asia Society.
- Stockman, Normal. 2004. *Understanding Chinese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Sugimoto, Yoshio. 2010. *An Introduction to Japanese Society*. Thir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h, Yong-Sug. 1996. "The Transformation of Historical Perspectives on Postliberation Capitalism." Transla. by Eun-Hee Chae and W. A. Hays. *Korean Studies* 20: 161-188.
- Vohra, Ranbir. 2000. *China's Path to Modernization: A Historical Review from 1800 to the Present*. Thi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Worden, R. L., A. M. Savada, and R. E. Dolan. 1988. *China: A Country Study*.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 Yi, Tae-jin. 2012. *The Dynamics of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Korean History*. Edward Park, Milan Hejtmanek, Todd A. Henry, Hong Soon-kwon, and Scott Swaner, transl.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East Asia Program.

Abstrac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the Modernization of East Asia: An Alternative Theoretical Explication

Kim Kyong-D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To explicate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capitalism in the three East Asian nations, a theory of selective modernization was applied by utilizing the concepts of international acculturation and adaptive change which is defined by the principles of selectivity of the political and cultural sources. Analysis is focused on the issue of convergent and divergent patterns of change that resulted from the two separate waves of moderniz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the post-World War II period. Although the initial response to the surge of international acculturation of imperial encroachment of the first wave modernization was a common stance of “closure,” the three nations each soon made adaptive changes under the variable internal conditions, creating their own versions of capitalism. Also, since 1945 each nation progressed into divergent paths of modernization developing different versions of capitalism, and yet commonly managing to achieve impressive economic success which relied to a variable extent on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Keywords | Selective modernization theory, political and cultural selectivity, role of the state, nature of private sector, inter-relationships between state and business